

# 미래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충북이전배제철회관련건의안

의안 번호	227
----------	-----

제안연월일 : 2004. 7. 15.

제안자 : 지방분권및국가  
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 1. 주 문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에서 제외된 충북도민의 여망을 반영하고 보상차원에서 미래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특별배려를 바라는 150만 충북도민들의 뜻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함.

## 2. 제안이유

참여정부의 국정비전 12대과제중 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천계획중의 하나인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은 충청권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전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대사이므로 충청권에서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왔으나,

지난 7월 5일 정부의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 연기·공주 지역으로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성원해오던 충북도민의 허탈감이 극도로 팽배해 가고 있는 실정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미래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없 음”

## 미래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충북이전배제철회관련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부장관) 님께

먼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상생과 도약의 위업을 이루어 내고자 지역균형개발에 그 큰 뜻을 두시고 국가대계의 커다란 획을 그치게 될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에 진력하고 계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50만 도민과 더불어 환영하면서, 향후 신행정수도 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합니다.

신행정수도가 사실상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확정됨으로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후보지중 하나로 선정되었던 우리도의 진천·음성지역이 탈락되긴 하였지만 우리 충북도민은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충북도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등 협조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충북은 그동안 국가의 주요개발축에서 제외됨으로서 지역발전 및 산업화가 늦어지는 등 지금까지 많은 도민의 마음속에 소외의식이 內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150만 충북도민은 오송·오창과학산업단지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각종 지원시설을 건립하여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해온 결과 명실공히 중부권 첨단산업의 중핵지대로 발돋움하기에 이르렀으며, 21C 국가 주요 발전축이 충북이 될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신행정수도 입지결정은 국가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거국적 시각을 인식하여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만한 추진과 충청권 공조를 위하여 우리 도 차원의 유치경쟁을 자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7월 5일 정부의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 발표에서 충북이 사실상 탈락되어 우리 도민들은 허탈감속에서 충북소외가 재현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가고 있어, 도민의 뜻을 모은 우리 충청북도의회 입장을 밝혀 드리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첫째, 지역균형개발 차원의 「미래형 혁신도시」를  
반드시 배정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268개 기관을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각 시·도에 특화기능군별로 1~2개씩의 미래형 혁신도시에 180~200개의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고, 잔여기관에 대하여는 개별이전방식을 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충북의 북부지역 등은 신행정수도 1순위 후보지인 연기·공주지역에서 제천·단양은 100km 이상, 충주도 70km 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신행정수도 배후도시로서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4개 권역별로 충주지역은 도로교통 및 환경생태도시, 제천은 정보통신산업도시, 진천·음성은 디지털기업도시, 그리고 영동·옥천은 바이오농업도시가 건설되어야만 충청북도가 균형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건설된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 도에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을 제외시킴은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당초 후보지에 올랐다 탈락한 우리 도에 보상차원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므로, 지역균형개발 차원의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을 건의합니다.

## 둘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제 논리의 철회와 개별 공공기관 배정입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충남으로 결정된 이상 더 이상의 충청권 배제 논리에서 충북배제는 타당함을 잃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그동안의 소외의식을 불식시키고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배후지역의 역할에서 멀리 떨어진 충북의 북·남부 지역에 대한 특단의 배려가 필요함을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 발표된 공공기관 이전원칙에 『충청권 배제 발표 철회』와 개별공공기관 이전시 중부권은 바이오·교육·경제·전기·농업분야를, 북부권은 도로교통·환경·광업 분야 기관을, 남부권은 관광·산림·바이오농업·문화예술 분야의 『개별공공기관 배정』을 건의합니다.

이는, 우리 충청북도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도 다른 도와 동일하게 중앙으로부터의 배려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민이 그동안 소외되었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50만 도민과 더불어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모든 정책집행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과 『공공기관 충북권 배제 철회』, 그리고 『개별공공기관 이전 배려』 를 강력히 건의 하오니, 우리 충청북도에 특단의 배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4년 7월 20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